

제 2 과 목 : 민 법

4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 ②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행위이다.
-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 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한 권리의 소멸과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이를 주장해야만 인용될 수 있다.
- ②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없다.
- ③ 소멸시효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에서는 이와 같은 중단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지만, 제척기간의 경우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3.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결정한다.
- ②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다면, 당사자의 의사보다 관습에 의한다.
- ③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④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정한 의도만을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 ⑤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다.

4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 ③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이다.
 - ④ 소송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이는 사법질서의 안정성을 해치는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다.
 - ⑤ 증여계약에 대하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5.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통정허위표시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3자가 무과실이어서 할 필요는 없다.
 - ②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의 매도인은 그 허위표시에 관해 선의인 매수인의 상속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 ③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 스스로 진의와 표시행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④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 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
46.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언제나 일부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혼인이나 입양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농지의 2/3가 하천부지로 경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 ④ 계약 당시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공장 경영자가 공장 확장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관할관청에 도시계획상 그 토지에 공장건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지 않은 경우,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4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약의 내용이 범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는 강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 ④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어떤 해약의 고지가 아니라 단지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만으로도 강박행위가 된다.

4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 ㄴ. 수권행위를 취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ㄷ.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복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ㄹ.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ㅁ.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 ㅁ

49.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에는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 ②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법률행위의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③ 대리인이 복임권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126조가 적용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있다.
- ⑤ 법정대리에는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50.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권행위는 구두로 할 수 없다.
- ②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③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⑤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51.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 ②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하다.
- ③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다.
- ④ 주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 포기는 물상보증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 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다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2.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추인
-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 ③ 사기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
- ④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
- ⑤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

5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정관에 기재된 존립기간의 만료
- ② 정관에 기재된 법인의 목적의 달성
- ③ 총회의 해산결의
- ④ 법인의 파산
- ⑤ 설립허가의 취소

5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정한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해야 하며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사람은 18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단순히 자신을 성년자라고 칭하였을 뿐, 그 이상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쓰지 않았다면 그의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다.

55. 법인 및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공유로 한다.
- ②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약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다.
- ③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④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비법인 사단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 ⑤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5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취소원인은 소멸하였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음)

-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를 취소권자가 이행한 경우
- 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청구를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
- ㄷ. 취소권자가 파산한 경우
- ㄹ.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57. 신의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②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된다.
- ③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칙의 적용을 받는다.
- ④ 실효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으로 볼 수 있다.
- ⑤ 권리행사에 의해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

58.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③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④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59.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④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6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은 선의취득을 위한 양수인의 점유요건을 충족시킨다.
- ③ 양수인의 선의·무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다.
- ④ 무권리자와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할 수 없다.

6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② 원칙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 ③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 ④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 ⑤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므로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66.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급부가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부담부증여는 편무계약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67.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 ②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③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④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한 후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 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68.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임차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 ③ 임차인이 계약내용에 반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의 효과는 6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
-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임차인이 그 토지위의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등기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토지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를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69. 乙은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임차한 점포를 丙에게 甲의 동의없이 전대하여 점포의 점유를 이전하고, 현재 丙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乙과 丙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 ② 乙은 丙에 대하여 전대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위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상의 차임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丙을 상대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이 모두 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甲에게 점포를 명도하면 乙에 대한 관계에서도 인도의무를 면한다.

7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목적이 된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경매의 목적물에 대한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특정물의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종류물매매에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고, 다른 구제방법으로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완전물급부 의무가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부정된다.
- ⑤ 물건하자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71.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 ②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더라도, 수급인이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 ③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72.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②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專行)할 수 있다.
- ③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
- ④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⑤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73.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무상으로 위임사무를 처리한 수임인이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과실없이 손해를 입었으나 위임인에게 과실이 없으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 ⑤ 위임인이 파산하여 위임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를 수임인에게 통지하거나 수임인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수임인에 대항하지 못한다.

74. 여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여행을 시작한 후 각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설사 계약상 귀환운송의무가 있더라도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없다.
- ④ 여행자는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약정도 없고 관습도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없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⑤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여행기간 중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75. 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재판상 행위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 ③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정해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⑤ 해제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7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권리를 직접 취득시키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②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한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항변사유를 들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낙약자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제3자는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한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한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면, 잔금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중도금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 ②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된 이후에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제공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에 대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

7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자가 가분적 채무의 일부를 이행지체 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 받은 채무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②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 ③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그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호받는다.
- ⑤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가 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79.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만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은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상대방이 일정한 부담을 갖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자가 위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되기 전에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증여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증여자는 언제나 담보책임을 진다.

80.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 ② 실제 교부된 금액이 계약금계약에서 약정된 계약금보다 적은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한 금액이다.
- ③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